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배포일시	2018. 5. 8(화) /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영국, 사무관 박진홍 • ☎ (044) 201-3324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나…서민·지방 피해 속출’ 보도 관련

□ 정부는 작년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 8.2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17.10.24)에 따른 新 DTI('18.1.31 시행)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으로 규제 적용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

투기지역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행복도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25개구, 과천, 세종(행복도시), 대구 수성, 성남 분당
조정대상지역	서울,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 세종(행복도시)

□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한 과잉 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 일부 지방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 주택공급 추이(만호) >

구분	'13	'14	'15	'16	'17
인허가	24.8	27.3	35.7	38.5	33.2
준공	21.8	24.5	25.6	25.6	28.8

-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18년 3월말 기준 30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 등을 시행 중이며,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18.2월)* 하였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도 '18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 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관련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5.8) >

-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니...서민·지방 피해 속출
 - 부자, 강남 겨냥 각종 규제책 쏟아 부어 일단 집값 잡았지만, 피해도 '무차별'
 - 서울 8.5% 급등·지방 1% 하락 양극화 높아진 대출문턱 탓 서민 부담만증가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 044-201-3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